

## 제4절 순천의 소작쟁의\*

### 1. 일제 강점기의 소작쟁의 전개양상

#### 1) 소작쟁의의 등장 배경

일제는 강점 초기 자국의 만성적인 쌀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를 형성·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1912~1918)과 산미증식계획(1차산미증식계획 : 1920~1926, 2차 산미증식계획 : 1926~1934)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계통농회체제(系統農會體制)’를 출범(1926. 3.)시킨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식민지 지주제’를 매개로 일제는 조선의 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을 통제하였다.

식민지 지주제의 완성과 더불어 조선의 농촌사회는 극심한 변동과정을 거쳤다. 토지조사사업과 조선민사령(1912. 3.) 등으로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제도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일물일주(一物一主)의 원칙’, ‘자유계약의 원칙’ 등이 인정되면서 농민들의 경작권은 여지없이 부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주·소작인 간의 온정주의(paternalism)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즉,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가부장적인 보호의무와 같은 관습이나 전통 또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각종 공동체(洞會·洞契) 질서가 해체되었다. 그런 가운데 농민들은 토지에서 유리되어 지주자본에 개별적으로 포섭되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소작인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소작권이나 소작료 문제를 둘러싼 지주·소작인 간의 분쟁은 이 같은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조선농민들은 일제와 식민지 지주들의 이중적 수탈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농가수지 적자에 허덕였다. 특히 1930년대 초반의 공황기에는 1년간의 농가수지 적자가 자작농 65원 6전, 자작 겸 소작농 10원 87전, 소작농 32원 21전에 달할 만큼 악화되었다. 농가수지의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히 부채농가나 춘궁농가의 숫자도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1930년대 초반 전체 농가의 75%가 평균 60원 53전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으며, 춘궁농가도 전체 소작농가의 66.7%에 달했다. 이 같은 농가수지 적자는 결국 다수의 자작농을 소작농으로 몰락시켰다. 1915년 전체 농가 가운데 소작농은 40.9%에 불과하였으나 1925년에는 42.2%, 그리고 1935년에는 51.9%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sup>1)</sup>

한편,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과 더불어 지방의 정치구조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3·1운동 때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토호적인 기반을 가진 봉건유생이나 지주들도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같은 전 민족적 만세시위를 직접 경험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안정적 지배를

\* 제4절은 지수걸(池秀傑) 집필임.

1) 강만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 비평, 1987.

위해 지방정치구조의 재편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1920년경에 작성된 『齋藤實文書』에 보이는,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케 하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해 그것과의 맥락을 통해서 매관화해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선인 자본가와 총독부가 제휴해야만 조선을 개발하고 조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자본가 제휴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들은,<sup>2)</sup> 이른바 ‘문화정치기’에 추진된 지방정치구조 재편정책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일제는 지방정치의 안정을 위해 기존의 토호적 양반(지주)세력을 배제하고, 개항 이후의 상품화폐경제 발전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흥자산가(특히 지주)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여 ‘총독정치의 민간조력자’로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총독부는 총독정치의 민간조력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조선의 신흥자산가(유지집단)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까닭에, 위와 같은 지방정치구조 재편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농촌사회(1930)는 약 5,000명의 대지주(30정보 이상 소유지주)와 3만 3,000명의 마름들이 140만 명의 순소작인과 85만 명의 자소작농을 정치 경제적으로 대리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로 변모하였다.<sup>3)</sup>

이 같은 지방정치구조 재편정책은 소작인조합운동의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문화정치’의 출현과 동시에 형성된 이른바 총독부권력, 지방유지집단, 지방혁신청년집단의 힘관계는 소작쟁의 양상을 살필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920년대 전반기의 소작쟁의는 문화정치 공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동향, 그리고 이것에 대응한 총독부 지배정책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성격 파악이 불가능하다.<sup>4)</sup> 1920년대 전반기에 활성화한 소작인조합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첫째, 총독부는 3·1운동으로 고양된 농민들의 계급의식, 민족의식을 개량화하기 위하여 공존공영주의(계급 및 민족 타협주의)를 기초로 하여 소작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후원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제는 지방행정기관(군청·경찰서·면사무소), 식민지 지주, 소작 농민들의 호혜적 공생관계를 소작인조합(소작인회)을 매개로 조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안정적인 지방통치와 더불어 쌀 증산도 이루고자 했다.

둘째, 조선인 지주들도 총독부의 지방정치구조 재편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일제가 식민지 농촌사회에 유지집단을 형성한 주목적은 총독정치의 조력자를 키우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쓸모 있는 조력자는 아무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지방사회의 유지집단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당국의 신용’과 동시에 ‘사회의 인망’을 획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총독부권력과 유지집단은 양자를 동시에 획득하고자 3·1운동 직후부터 소작인조합운동과 수양청년회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근대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지방사회의 ‘유지청년(有志青年)’들은 전근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정태적 지주(양반·토호)들과 달리 당국의 신용

2)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日鮮 자본가의提携」, 『齋藤實文書』No. 742(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67쪽).

3) 飯沼二郎, 「일제하 조선의 농업혁명」,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116~134쪽.

4) 문화정치기 일제의 조선지배정책, 특히 유지포섭정책에 대해서는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과 사회의 인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야 유지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 집단이 1920년대 초반 수양청년회운동이나 소작인조합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대체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셋째, 문화정치의 실시로 합법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른바 혁신청년집단이 지방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의 혁신청년들이 소작인조합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1922년경부터였다. 1922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각 참가단체 대표들은, 조선소작인상조회(朝鮮小作人相助會)가<sup>5)</sup> 자산가 중심의 단체이므로 이를 타도하고 순수한 소작인 구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며, 1922년 7월 조선노동공제회는 '소작인은 단결하라'는 선언에서 기존의 노자협주주의를 기초로 한 소작인조합을 비판하는 가운데 소작인의 자각적 단결을 강조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지방의 혁신청년집단은 1920년대 초반부터 소작인조합운동이나 수양청년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농촌사회 내부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정치구조는 1924년을 경계로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디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대립은 공존공영론에 입각한 개량적인 운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였다. 특히 이런 모순은 소작인운동이 발전하면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1922~1923년은 '진정'이나 '호소'의 형태로 소작인조합운동이 전개되었으나, 1924년에 접어들면서 시위나 직접 행동이 선호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런 변화를 간취한 총독부권력과 지주는 1924년경부터 소작인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억제함과 동시에 반관적(半官的) 지주조직인 계통농회를 결성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처럼 정세가 변화하자 혁신청년집단은 농민운동의 전국조직을 건설한다거나 운동노선을 변경하는 등 그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였다. 혁신청년집단은 1924년 4월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였으며, 1927년 9월에는 분립하여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을 결성하였다. 소작인조합을 농민조합으로 개편한 뒤 지방의 혁신청년들은 소작관계 개선투쟁과 더불어 농업정책 반대투쟁(농지·농사개량정책·삼림정책), 민주적 권리(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 쟁취투쟁, 민중문화운동(야학운동·독서회운동·소인극운동·노래보급운동) 등 농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향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sup>7)</sup>

상황이 이에 이르자 농촌사회에는, 총독부권력과 지방유지집단을 한편으로 하고, 혁신청년집단과 농민들을 한편으로 하는 대립관계가 점차 첨예화했다. 가령 1920년 초반 공존공영의 구호 아래 수양청년운동이나 소작인조합운동을 함께 했던 이들이,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 그룹은 면협의회나 학교평의회와 같은 공식부문의 통치기구 혹은 농회나 금융조합과 같은 비공식부문의 통치기구로 진출하고, 다른 한편은 조선공산당에 입당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은 이런 분위기의 일단을 보여준다.

5) 강동진, 위의 책, 238~243쪽. 조선소작인상조회는 소작쟁의를 미리 방지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1920년 8월 宋秉畷 등 친일파 지주들이 조선총독부의 후원 아래 조직한 사이비 소작인 단체이다. 소작인상조회는 경기도, 충청도지역에 몇 개의 지부조직이 있었으나 소작농민들에게 배격되어 1925년경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6)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 1969, 109~122쪽. 순천지방청년회도 청년당대회에 韓泰善과 鄭大熙를 파견하였다.

7) 지수걸, 『탈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 85~103쪽.

